

구동에서



김종민
논설실장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이전의 보수정권과는 확연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맞은 5·18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사에 주목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에도 완결하지 못한 ‘헌법 전문 수록’이 가능할지 기대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다. 그날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다. 오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2022년 5월18일)

윤 대통령은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이라며 굳건한 의지를 나타냈다. 최대 관심사인 헌법 전문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었고, 뒤늦게 시작한 진상규명에 대한 표현도 빠졌지만 진심을 믿어야 할까. 윤석열은 1980년 신군부 쿠데타 발생 당시 19살의 대학 1학년, 나름으로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는 옹골찬 청년이었다. 알려진 대로 서울대 법대 5·18 모의형사재판에서 전두환에게 ‘헌법을 침해한 중대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한 의혈 법학도인 그여서다.

홍인화의 ‘5월이야기’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42년이 흘렀다. 긴 시간 동안 고통스러웠고 힘들었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광주시민들은 여느 도시와는 다른 시간을 보냈다. 국가폭력에 생명을 잃었고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렸다. 고통과 절망, 그리고 좌절 속에서 대한민국의 민주화가 싹트고 결실을 맺으며 세월은 흐르고 또 흘렀다. 그리고 기다란 담론 못지 않게 소소한 이야기들이 잊혀지지 않고 살아남아 광주 5월의 스토리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 올해 참으로 기념행사가 많았다. ‘오월, 진실의 힘으로! 시대의 빛으로!’를 슬로건 아래 우리는 광주의 5월을 재조명했다. 그렇다면 진실은 드러났을까. 그런 거 같지 않다. 광주 1호였던 김군이 살아있고 김군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 시민차별환이라는 사실, 또 김군이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며 썼다는 이야기 등이 나오긴 했지만 명쾌하지 않다.

독자투고

가정폭력 예방 신고의식 강화해야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폭력과 다르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가 심각하며 가정을 해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정폭력행위에는 신체적 상해나 폭행, 신체

검박을 벗은 정치인 윤석열의 약속은 이랬다. “3·1운동이나 4·19 정신에 비취 5·18 정신 역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이기에 국민 전체가 공유하는 가치로 전혀 손색이 없다.”(2021년 7월17일) 메시지는 분명했다. “5·18 정신은 곧 민주주의 정신이므로 헌법전문에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됐고, 광주의 피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꽃 피웠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이고 딸이다.”(2021년 11월10일)

“오월 정신이 피로써 민주주의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 5월 정신을 잊지 않아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오월 정신은 항거 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2022년 2월 6일)

대선 후보 시절 유세에서 윤석열은 전두환 미화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2021년 10월19일)

당선 후에도 그랬다. 초대 내각 인선에서, 비서실, 차관급까지 능력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으나 자신을 따르는 측근을 기용하는 모양새가 됐다. 광주·전남 패성에 지역 민심이 뒤흔들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정 철학도 무색해졌다. 게다가 국정과제에는 가장 핵심이라 할 5월정신의 헌법 수록이 포함되지 않

았다.

결국 진정성을 입증해야 한다. 5·18기념재단의 인식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동의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 개정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를 들어왔다.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참에 호기를 살리지 못한다면 지금껏 5·18을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절묘하게 이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이 꼬집는 표심잡기용이나 할리우드 액션이 되는 것이다.

5년 전 5·18 37주년 기념식상,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공약을 지켰다고 다짐했다.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다. 광주정신을 헌법으로 계승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 시대를 열겠다.”(2017년 5월18일)

다음해 2018년 3월, 개헌안이 발의됐다. 현행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4·19혁명,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불성립’으로 중도 무산됐다.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논의는 1987년부터 이어졌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개헌안에 포함됐지만 합의 과정에서 삭제된 후 20년

동안 묻혔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원포인트 개헌 추진 역시 흐지부지됐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쳐 10년 후인 2017년 문 대통령 대선 공약에 반영한 후에도 진척을 보지 못했다.

“헌법 전문에 5·18을 새기는 것은 5·18을 누구도 훼손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자리매김하는 일이다. 언젠가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 뜻을 살려가기를 희망한다.”(2020년 5월18일)

광주의 바람이다. 국민적 요구다. 시대적 요청이다. 국민 통합을 위한 제1 조건이다. 보수 정권이, 여당 국민의힘이 추진하겠다는데, 거대야당 민주당으로서야 마다 할 이유가 없다. 국회 통과를 무난한 수준이다.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한 초당적 협치가 가능하다. 국민투표까지 어렵지 않게 갈 수 있다.

5·18은 광주시민들의 저항과 참여, 연대의식으로 세계사적으로 보기 드문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받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서 헌법적 당위를 지닌다. 헌법 수록은 윤석열이라면 쉽게 풀어낼 과제다. 광주는 임기 시작 첫 걸음이다. 무엇보다 꾸준히 마음을 다해 다가서야 한다. 조금이라도 의문이 남아선 안 된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주저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아직 5·18의 진실은 모두 밝혀지지 않았다. 진정한 사과와 반성도 이뤄지지 않았다. 헌법 전문 수록은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회복하는 주춧돌을 놓는 것이다.

5월이 달라지고 있다

오월이 문화예술작품을 통해 시민과 국민들에게 다가간다. 적지 않은 감동을 불러일으키며 광주의 5월에 대한 가치를 되새기게 한다.

지난 14일 낮에는 ‘광주항쟁기념 국민대회’가 열렸다. 518기념행사위원회측은 주말에 광주를 찾아온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었다. 필자와 기록관 식구들도 맛있게 먹었다. 5·17 전야제는 3년 만에 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큰 행사였다. 행진이 진행될수록 시민들이 늘어났고 행렬은 순식간에 2천여명이 넘어 금남로를 가득 메웠다. 어린자녀를 유모차에 태우고 나온 젊은 부부들이 보였고 테이프를 전야제에서 하는 커플족들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또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도 보였다. 금남로에 나온 시민 모두가 42년 전, 잊지 못할, 기억해야 할 그날을 기렸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은 지난 주 ‘오월공동체, 기억과 공감의 기록’이란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었다. 그중 영상기록물을 광주에서 처음으로 제작한 ‘광주YMCA 5·18영상 기록특별위원회’(이하 영상위원회)를 소개한 박용수 발제자는 “영

력은 없어져야 할 중대한 행위로 즉범죄인 것이다.

가정폭력은 더이상 가정내부의 일이 아니고 특히 부부싸움은 갈로물베기가 아닌 엄청난 범죄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폭력행위 인 것이다. 1차적 집단인 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평온하고 화목함이 이어져야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이 전환되고 신고의식이 강화돼야 하는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5월 가정의 달! 더이상의 중대범죄인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화기에 한 일들만 가득차 가정에서 희망가가 울려 퍼져 가족구성원들이 좋은 것만 몰려받고, 국가 발전 위한 경제동력에 힘을 실어 가족행복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하기를 강하게 기원해 본다.

(진병진·여수경찰서 생활안전계)

社說

공식 선거운동 시작에도 조용한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첫 주말 유세를 앞두고 있지만 분위기는 좀체 뜨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식 구도에서 이전 지방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커지면서다. 특히 내로남불 식 민주당의 공천의 오만과 뻔뻔함에 민심이 돌아선 상황으로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방 정치 발전을 위해, 다양성의 확장을 위해 여당이 된 국민의힘, 정의당과 진보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은 고군분투해야 한다. 물론 주민들은 정당이 아니라 인물을 보고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지난 3·9대선 연장전으로 사활을 걸었다. 5년만에 기사화됐한 국민의힘은 기세를 몰아가야 하고, 정권을 내준 민주당은 단단히 실력을 베포려다. 광주·전남에서는 다수의 후보자를 낸 국민의힘의 득표력과 당선여부가 주목받고 있으며,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엔 민주당과 유력 무소속 후보 간 치열한 대결을 예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냉담하기 짝이 없다. 현재 모습이라면 역대급 낮은 투표율을 기록할까 우려가 앞서고 있다.

지역경제 활력 광주상생카드 혜택 연장을

광주지역 소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지역화폐 ‘광주상생카드’ 할인 혜택이 다음달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당 체크카드 50만원, 선불카드 50만원 등 매월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총선 시 10% 할인이 가능한 이유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지만, 광주시는 관련 예산 지원에 따른 부담을 들어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신속 보급 등에 따른 결제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소상공업체를 ‘간중등록 가맹점’으로 규정했으나 유예기간이 오는 6월30일 종료됨에 따라 7월부터는 미등록 업체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후속 안내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민과 소상공인들 사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9년 3월 처음 도입된 상생카드는 발행여이 첫째 864억원에서 2020년 8천641억으로 10배 뛰었으며 2021년 1조2천230억에 달하는 등 해마다 급증했다. 올해도 1분기만 3천669억원으로 상반기 책정액 6천억원의 절반을 넘어섰으며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5

시민사회단체는 터줏대감 격인 민주당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이 지역 정치 발전을 위해 변화하기를 기대하는 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 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지난 30년 동안 지켜봤다고 일침을 가했다. 지방의회 제도가 부활한 1991년 이후 이어진 독점 행태를 타파하지 않으면 2년 후 국회의원 선거, 4년 후 지방선거에서 똑같은 공천 참사가 반복되고 정치는 더욱 퇴보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광주·전남의 경우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선거구는 각각 20곳 중 11곳, 58곳 중 26곳에서 경쟁 후보가 없어 민주당 당선이 확정됐다. 당연히 후보자의 자질도 검증되지 않았고 공약도 모른다. 민주시민의 권리인 참정권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여거저거서 엄중한 경고가 흘러나오고 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도덕성과 능력이 최우선이다.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과 무소속 후보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방의 미래는 오롯이 주민들의 손에 달렸다. 진짜 일꾼을 뽑아야 한다.

월 가정의 달 등으로 쓰임새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상생카드는 백화점, 유흥주점, 대형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을 제외하고는 지역 대부분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혜택,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중소 사업장에 카드 결제 수수료 전액(0.5%-1%) 지원 등으로 급성장했다.

코로나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화폐 조기 정착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이 발목을 잡게 됐다. 최대 8%인 국비 보조율이 올해는 4%로 축소돼 시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할인을 및 혜택 연장 여부가 불투명하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역화폐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할 경우에만 국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해 재정 압박을 더하고 있다. 광주시는 상생카드를 받을 수 있는 가맹점 등록도 안내해 하나 다 시도에 달리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상생카드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시민들이 적지 않다. 능자 행정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를 새겨 들어야 한다. 촉박하다. 시급하게 정책 결정을 내려 혼란을 최소화해줄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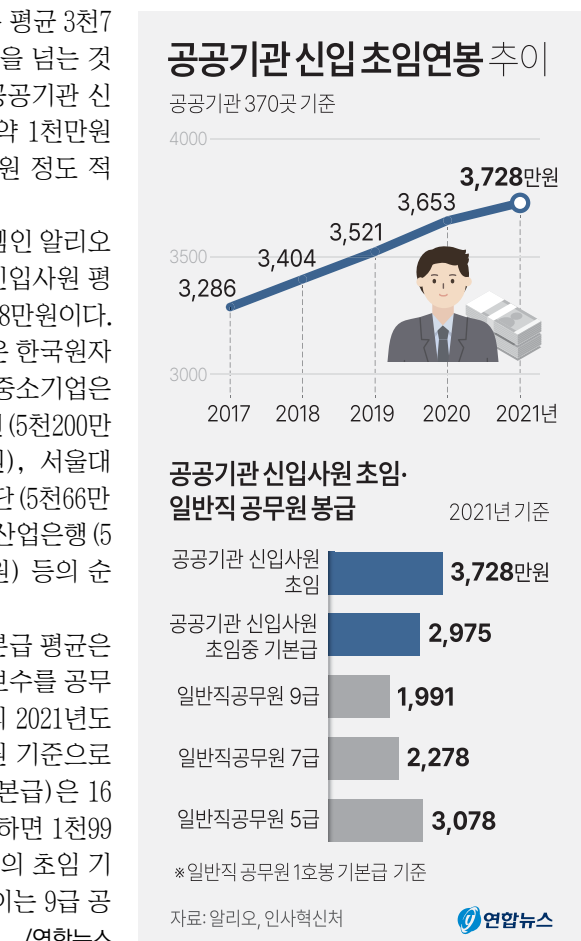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공공기관 신입초봉 3천728만원…9급 공무원보다 많아

지난해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은 평균 3천700만원 수준이며 이 중 9곳은 5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급만 놓고 보면 공공기관 신입사원 초임이 신입 9급 공무원보다 약 1천만원 높고 행정고시 출신 5급보다는 100만원 정도 적은 수준이다.

1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370곳의 신입사원 평균 초임은 전년보다 2.0% 오른 3천728만원이다. 신입사원 초임이 가장 높은 공공기관은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5천300만원이다. 이어 중소기업은행(5천247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5천200만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5천179만원), 서울대학교병원(5천142만원), 한국연구재단(5천66만원), 한국투자공사(5천54만원), 한국산업은행(5천52만원), 항공안전기술원(5천21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체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 기본급 평균은 2천975만원이다. 공공기관 신입사원 보수를 공무원과 비교하면 꽤 높은 편이다. 정부의 2021년도 공무원 보수규정을 보면 일반직공무원 기준으로 9급 신입(1호봉) 직원의 월지급액(기본급)은 16만5천9천500원이며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천991만원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신입사원의 초임 기본급이 2천975만원인 것을 고려하면 이는 9급 공무원보다 984만원 많은 것이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국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6
	정지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광고국 650-2072	
	경제부 650-2050	사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0	
	사후부 650-2040	T V 본부 650-2009	기획사입국 650-207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刊)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